

FOCUS

- 2003년 골재공급 확대 -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14일 골재채취 허가기관인 시·도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올해 계획량보다 12% 정도 늘어난 2억4천217만4천 m^3 의 골재를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내용의 '2003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계획에서 내년 한해동안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 수요는 모래 9천893만7천 m^3 , 자갈 1억2천903만 m^3 등 모두 2억2천796만7천 m^3 정도 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불허 등으로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에는 수해복구 등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올해보다 10%이상 늘어난 규모의 골재를 공급키로 했다.

골재원 별로는 하천과 바다 등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해 1억9천526만7천 m^3 의 공급하고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얻어지는 비허가분으로 4천690만7천 m^3 를 충당키로 했다.

금년도 골재 채취허가량 1억9천526만7천 m^3 는 지난해 공급허가계획량 1억6천633만5천 m^3 에 비해 14.81%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하천에서는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3천736만 m^3 의 채취를 허가하는 한편

바다에서는 전년대비 1.67% 늘어난 4천83만2천 m^3 , 산림에서는 27.69% 증가한 9천773만7천 m^3 , 육상에서는 38.13% 늘어난 1천712만9천 m^3 의 골재 채취를 허가해 원활한 공급을 도모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경우 모두 1억62만8천 m^3 를 공급하되 자체 채취허가를 통해 6천802만7천 m^3 , 비허가를 통해 2천698만9천 m^3 를 공급하고 부족분은 타지역에서의 반입을 통해 충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해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강원지역은 지난해보다 30%이상 늘려 1천635만5천 m^3 를 공급하는 한편 충북지역에는 894만1천 m^3 , 전북지역에는 1천63만8천 m^3 의 골재를 각각 공급토록 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예상 수요 1천689만9천 m^3 보다 많은 2천526만 m^3 의 골재 채취를 허가해 1천841만8천 m^3 를 이 지역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천879만3천 m^3 의 골재 채취를 허가, 비허가를 포함한 지역수요 1천870만9천 m^3 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영남·제주 등지에 반출토록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주로 하천과 산림에서 모두 2천483만5천 m^3 의 골재 채취를 허가,

이 지역공사에 필요한 2천426만9천m³의 수요를 매우도록 했으며, 모두 3천529만3천m³의 골재 수요가 예상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천558만7천m³는 채취허가를 통해, 789만m³는 비허가를 통해 각각 충당하되 부족분은 타 지역에서의 반입으로 해결토록 했다.

제주에서는 334만1천m³의 수요를 예상하고 295만5천m³는 채취허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반입토록 했다고 밝혔다.

- 금년 경제성장을 5.7% -

한국은행의 금년도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2003년중 우리 경제는 소비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데 힘입어 5.7%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건설투자는 전년도 활발하였던 건물건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토목건설이 증가로 돌아서 전체적으로는 금년과 비슷한 2%대 중반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내다봤다.

건물건설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전년 이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점, 금년도 부동산가격 안정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가율이 전년 13% 정도에서 금년중 2~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목건설은 정부의 금년도에 SOC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년도 추경예산의 상당부분 집행이 늦어 실

[표 1] 정부의 SOC예산 추이

(조원)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액	11.6	13.4	14.1	15.8	18.1	16.8

주 : 1) 추경예산 기준, 정부지원 SOC 민자유치사업 포함

제로는 금년 초 중에 집행될 전망임에 비추어 상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정에너지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의왕시, 전북 군산시 등에 이어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량에 환경친화적인 대체 청정에너지 '바이오디젤'을 개발하여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내 신한에너지(주)와 BDK(주) 등 2곳에서 생산중이고, 별도 공급장치의 설치없이 기존 주유소를 통해 공급되며 가격이 경유보다 50% 가량 비싸지만 세금 면제혜택을 받아 사용 가격은 비슷하다.

수원시는 팔달구 이의동과 신동에 소재한 주유소를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소로 산업자원부에 지정 신청하고 지난달부터 관용차량과 청소차량 20대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는 시범 보급 주유소를 구별로 3개소 이상 확대 지정하고 관용차량과 청소차량, 레미콘차량, 화물차량 등에 우선 공급하는 한편 일반 경유용 차량도 희망할 경우 우선 공급하는 등 시범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콩기름 등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나온 물질로 일반 경유와 바이오디젤을 8대 20 비율로 혼합시켜 만든 혼합유(BD20)이다.

구조변경 없이 경유자동차 연료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청정에너지로 일반 경유차량에 비해 탄화수소(THC) 38%, 미세먼지(매연)는 19%까지 줄일 수 있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활용 시내버스 보급과 함께 대기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덧붙였다.

- 금년 특허제도 개선 -

특허청은 금년부터 바뀌는 특허제도에 관해 지난 12월 발표했다. 새해부터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되며, 이는 2003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 출원인이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전기회를 주고 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5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수 있으며, 특허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ipris.or.kr>)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국 특허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된다.

또한 특허출원수수료를 이제는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해,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특허심판기술설명회 및 심판관면담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의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설명회나 면담을 수시로 실시해 복잡한 심판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 조합간 중복물품 단체수의계약 대상서 제외 -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월 30일 단체수의계약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도록 운용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 물품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1개업체가 1개 조합을 통해서만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납품토록 하는 1사 1조합 원칙을 운용하는 데 있어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설립한 업체를 동일업체로 규정, 동일업체는 한 개의 품목만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납품토록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이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여, 채무보증, 자본참여 등이 없는 단순친족 관계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는 동일업체로 보지 않게 돼 앞으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배정기준표와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가 1개업체라도 10% 이상이면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추천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참여조합원의 1/4이상이 10% 이상일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설조합의 물품은 제외하되, 기존 지정조합의 물품을 영위하고 분쟁이 없는 물품은 지정하도록 하였다.

- 건설경기 대체로 양호 -

건교부 발표 지난 10월 건설경기 동향에 의하면 건설기성이 상승세로 반전하고, 건축허가 및 건설수주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호조속에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도 주거용 건축허가가 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하고, 상업용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도 상승하여 전년 동월대비 40.8% 증가

[표 1] 건설기성액 추이변화

(단위 : 십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02.1/4	2/4	3/4	8	9	10
기성액	45,990	48,633	4,278	9,315	12,328	12,633	10,277	12,796	12,400	4,018	4,321	4,552
증감율(%)	-3.1	5.7	6.3	1.7	-0.4	7.9	10.3	3.8	-1.8	-4.9	-10.1	6.4

[표 2] 건축허가면적 추이변화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02.1/4	2/4	3/4	8	9	10
허가면적	81,059	97,717	9,216	15,634	26,290	25,538	31,600	38,336	30,271	9,608	10,221	12,974
증감율(%)	11.8	20.6	28.7	-14.0	22.5	20.9	102.1	45.8	18.5	17.5	15.4	40.8

[표 3] 건설 수주액 추이변화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1.10	'01.1/4	2/4	3/4	'02.1/4	2/4	3/4	8	9	10
수주액	60,152	67,836	5,734	10,520	17,461	14,825	18,377	19,273	15,327	5,483	5,530	6,991
증감율(%)	17.6	12.8	29.7	-20.7	2.4	16.2	74.7	10.4	3.4	25.3	-11.1	21.9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초 건축허가면적에 비해 증감율은 크게 떨어졌으나 이는 주택가격 안정 대책 및 제조업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로 금년도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수주액도 건축허가면적 증가로 도로·공항 등 토목공사와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세이건설 해외 사업분야 확대-

日本の 다이세이건설(大成建設)은 해외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대만에 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태국 방콕에 아시아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할 총괄지점을 신설했다.

이로써 다이세이건설은 한국부터 중동까지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현 수주고 1천500억엔, 이익률 4~5%를 유지하면서 수주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국내 수주의 침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다이세이건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송수관 프로젝트, 대만에서 신간선 관련공사인 지하철2공구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아부다비지점과 타이페이지점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개발원조(ODA)와 관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학교 건설이나 사회기반 정비사업 확대가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태국의 방콕지점적인 영업거점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이세이건설은 국제영업이나 해외현장 책임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무분야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완성공사 이익률을 4~5%대로 유지하면서 해외사업 수주확대에 나서 내년 이후에는 연이익률을 10%까지 증가시키고 수주·매상고 2천억엔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일시멘트 독일 바커사와 기술협력-

한일시멘트가 건축용 혼화제 다국적 기업인 독일의 바커사와 특수모르타르 제품개발과 기술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일시멘트는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바커사와 특수모르타르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두 회사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국내 건조 시멘트 몰탈 시장에서 '레미탈' 브랜드로 60%를 점유하고 있는 한일 시멘트는 바커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만간 각종 특수 몰탈 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모르타르시장에 적극 진출한 한일시멘트는 이번 기술협력을 통해 고급마감재와 자동수평 조절용 모르타르, 콘크리트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단열용 접착마감재 등 특수용 모르타르 생산부문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의 바커사는 전세계 10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품목도 3천여개에 이르는 등 세계적인 특수모르타르 전문업체다.

-아세아시멘트 품질경영시스템 재 인증-

아세아시멘트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건설품질인증원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재 취득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문서의 제·개정 작업을 착수하여 8월 1일부터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였고, 10월 22일부

터 25일까지 한국건설품질인증원(KICM-QA)에서 실시한 전환심사를 통과하여 2000년판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을 취득한 것이다.

새로운 품질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협회(ISO)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도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서류를 비롯한 사내 문서의 관리와 열람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세아시멘트는 이번 인증 재 취득을 통해 시멘트·레미콘 및 드라이몰탈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을 ISO 9001인증 2000년판에 적합하도록 전환하였으며, 이것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앞으로 영업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라 전망했다.

-2002 국내경제 10대 뉴스-

한국경제 자신감 회복시킨 월드컵 4강 신화

2002년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민족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월드컵에서 4강 신화와 함께 ·붉은 물결·의 감동을 연출하면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가계부채 위험 수위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가구 당 3,000만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가계 빚을 모두 합하면 4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급기야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등 내수 부양은 우리경제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 투기

망령·을 되살렸다. 서울 강남권에서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양도세 강화, 청약제한 등을 골자로 한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은행 주5일 근무 실시

은행권 주5일 근무가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은행권이 본격 실시함으로써 다른 산업부문에도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3년간의 긴 협상 끝에 지난 10월 24일 드디어 역사적인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한국의 제1수출시장으로 부상

우리 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미 수출을 앞질러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올 들어 9월까지 홍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비중이 20.3%로 같은 기간 대미 수출비중(20.2%)을 추월하였다.

미국 발 금융위기, 국내경제 위협

회계부정스캔들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식회계 기업들이 중징계 되었으며,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다.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경기상황을 불투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태풍·루사·한반도 강타

태풍·루사(RUSA)·가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동안 전국을 강타해 인명피해 246명, 재산피해 7조원 이상이 발생했다. 지난 99년 태풍·올가·의 재산 피해액에 비해 5배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수해 전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기업 순이익 사상 최대 기록

2002년 우리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효율성 증가, 수익위주의 경영정책,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그리고 반도체가격 회복, 내수시장의 호조 등으로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올해 3/4분기까지의 순이익은 22조원에 달했다.

국가신용등급 A회복

6% 대의 건설한 경제성장과 1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확보 등에 힘입어 올 3월과 6월에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와 Moody·s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이례적으로 두 단계 상향조정하였다. 이어 7월에는 S&P가 등급조정에 가세, 국가신용은 A등급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남북한 시멘트 생산량 10배 차-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은 남한 5천204만6천톤, 북한 516만톤으로 남한이 북한의 10배 가량 많았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남한은 1.5%, 북한은 12.2% 각각 증가한 것이다.

조강생산량은 남한이 4천385만2천톤, 북한이 106만2천톤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41.3배나 많았다.

교통분야에서는 남한의 철도길이가 3천125km인데 비해 북한은 5천224km로 북한이 70%

가량 긴 반면 도로는 남한이 9만1천396km, 북한은 2만3천963km로 남한이 북한의 3.8배를 기록했다.

이를 지난 70년과 비교해 보면 철도연장은 남한이 다소 줄어든 반면 북한은 29% 늘어났으며 도로연장은 남한이 2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북한은 20%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에서는 건설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은 8.2%, 북한은 7.0%로 나타났다.

에너지분야에서는 남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1억9천840만9천TOE인데 반해 북한은 1천623만TOE로 남한이 북한의 12배 수준이었다.

남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매년 증가한 반면 북한은 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다 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 4.19TOE, 북한 0.73TOE로 남한이 북한의 6배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구조는 남한이 석유 50.6%, 석탄 23.0%, 원자력 14.1% 등으로 구성된 반면 북한은 석탄 71.2%, 수력 16.3% 등으로 이뤄져 석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용량은 남한 5천85만9천kW, 북한 775만2천kW로 남한이 북한보다 6.6배 많았다.

발전량은 남한 2천852억kWh, 북한 202억kWh로 남한이 북한의 14배 수준이었다.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은 남한이 70년대 중반 북한을 추월한 이후 계속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13배에 달해 전년의 12.6배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졌으나 한 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3년간 플러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706달러인데 비해 남한은 8천900달러로 13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국민총소득규모는 남한이 4천213억달러, 북한이 157억달러로 25배 가량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남한(3.0%)보다 높은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99년(6.2%), 2000년(1.3%) 등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면에서는 지난해 7월1일 기준으로 남한이 4천734만3천명(세계26위), 북한이 2천225만3천명(세계48위)으로 한반도의 인구는 총 6천959만6천명을 기록, 세계 16위 수준이었다.

무역총액은 남한 2천915억4천만달러로 북한 22억7천만달러의 1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건축 허가 강화-

서울시는 지난 12말 공포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하반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배경동 주택국장은 23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내구연한이 60년이기 때문에 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으로 늘려도 안전에도 별문제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년 시 조례 제정때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허용연한을 강화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배 국장은 시행령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전제하고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거쳐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되 시행령 자체에는 허용연한을 적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금년 6월까지 시조례안을 마련, 시의

회의 심의를 거친후 7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 재건축 시기에 따라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현행대로 20년 이상을 적용하고 80년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선 30년 이상, 90년대 완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으로 20~40년 범위에서 차등화 하려는 것보다 강화된 것이어서 재건축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